

여야 정치권, '5월 조기대선' 가능성 촉각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 3월 선고 국힘,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 '反 이재명' 전선... '정권 유지' 민주, 중도·보수층 공약에 사활 청년 조직 전열정비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 25일로 지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5월 중순 '잠미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변론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3월 11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현재 결정에 따라 파면될 경우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60

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몰발에선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도부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며 '반(反)이재명 전선'을 공고히 하고, 정권 유지 여론을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는 일정 거리를 두지만, 일찌감치 '이재명 심판론'을 띄워 사전 야권 견제에 나선 것이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며 조기 대선 분위기가 예열되는 분위기도 감지된

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와 언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발간하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고리로 야 5당의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도 띄우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야권 연대의 토대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3·1절에는 조국혁신당, 진보

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어 탄핵 및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중도·보수층 공약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대남'(20대 대학생 남성)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표심

이 대선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층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극심한 경제적 부담과 불평등 속에서 벼랑 끝에 서있다. 희망이 아닌 좌절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 절망의 현실을 바꿔내는 것이 제일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을 지지하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도 이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국 조직으로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민석 "與, 극우 전광훈 2중대... 이재명에 지는 것 당연"

"이대로면 '만년 야당' 될 것"

김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우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도 내란·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시대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는 방법만 고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을 10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계엄을 예견하고, 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며 성장회복·내란극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해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내란극복에 동의하는 진보·중도·보수 당내외 정치세력과 대화·연대에 의한 국민통합정치의 기초를 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 대표의 지지율은 1위"라며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 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청년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실용주의' 강조

"민주당, 중도정당... 보수까지 책임" 향소심 26일 종결... 3월 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분심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정체성 공방'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게시물을 함께 싣기도 했다. 이는 당내 정체성 공방이 불거진 와중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정 회복, 법적 수호, 성장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향소심 사건은 오는 26일 종결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

다만 향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신정훈 "나주일반·혁신산단 중기 특별지원 재지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사진)은 23일 나주일반산단과 나주혁신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15년 첫 지정 이후 세 번째로,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2년간) △정책자금 융자 우대 △병역지

정업체 지정 △중기부 17개 사업 우대 지원 신청 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산단 입주 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상 우려를 호소해 왔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3일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수'에서 '학급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하지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제5항)을 신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정부·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맞손'

'기후위기 비상자문위' 시청서 회의 대화 기구 조성·제도 개선 등 논의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

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중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중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해정 농림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농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향 등을 다뤘다.

영농형 태양광은 3~4m 높이의 구조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

자문위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내륙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소개됐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 시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원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